

# "아리셀 공장 4번 불나는 동안 조치 안한 경찰이, 노동부가, 불법파견한 박순관이 죽인 겁니다"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07.09 21:46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추모 행동 발언 모음  
"기업의 탐욕 있는 곳에 노동자 죽음이 있다"  
"값싸게 쓰다버리는 산업노예 취급 언제까지"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9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추모행동을 진행했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중대재해 유족들이 화성시청의 '유족 지원 종료' 통보에 항의하며 화성시장실 앞에서 항의를 이어가는 동안, 서울에서도 아리셀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행동이 진행됐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주최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추모 행동이 9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오후 7시 열렸다. 추모 헌화와 묵념으로 시작된 추모행동은 발언과, 문화공연으로 이어졌다. 행사에 참가한 이들은 파이낸스센터까지 행진한 뒤 일정을 마쳤다. 많은 이들이 추모행동에 참석해 추모와 함께 발언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권 부위원장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리셀 공장에서 2021년 2번, 2022년 1번, 이번 화재 이들 전인 지난달 22일 1번 등 총 4번의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한 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23명의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기회가 4번이나 주어졌던 동안 경찰과 그리고 노동부는 그동안 뭘 한 거냐. 마땅히 해야 할 사건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은 경찰과 노동부가 죽인거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일갈했다.

그러면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사과하면서도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했다. 애도하고 사죄는 하는데, 내가 잘 못한 것은 없다는 뻔뻔함의 극치다. 불법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안전장치 없이 부러먹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죽인거다"라고 분개했다. 더해 "불법인지 알면서 노동자를 파견해 인건비 받아 먹고 산 메이셀 사장이 죽었다. 김용균 노동자가 죽은 후에도 위법한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위험의 외주화를 용인하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23명의 노동자를 죽였다"고 했다.

세월호의 노란리본, 이태원참사의 보라색리본, 오송참사의 녹색리본에 이어 우리는 화성 이주노동자들의 하늘색 리본을 슬픈 마음으로 마주한다고 전한 권 부위원장은 "더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고, 시민들이 바다에서, 길에서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오늘 민주노총이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며 주먹을 쥐고 약속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MTU)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노동실태를 전하면서 "이주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면 사업주들은 '너네 나라보다 몇 배의 임금을 주고 있으니 이걸로 다 보상되지 않느냐'고 한다.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권리는 돈으로 비교해서도 안되고 바뀌도 안된다"고 했다.

더해 "아리셀 리튬전지 회사 배터리 폭발 참사는 살인과 마찬가지다.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없고 안전규칙 따르지도 않았다. 3만원 내지 않아서 안전보건 추가 컨설팅 받지 못한 아리셀이 3년동안 안전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는게 말이 안된다"면서 "이런 식으로 거짓 안전보고 해서 운영된 사업장이 수도룩 하다. 그런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산업 현장에 만연한 위험 노동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이주용 조직부장이 발언에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에 속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과, 청주 아파트 신축공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추락 산재사고 등에 함께하고 있다.

이 조직부장은 베트남 이주노동자 산재사고 투쟁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죽어서도 차별당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아직까지 법원은 이주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을 때 회사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국인과는 다른 철저하게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 뒤 "사업주들은 이주 노동자를 그야말로 값싸게 쓰다 버리는 산업 노예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들이 무참하게 죽어나가는 기업살인의 현실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했다.

택배노동자도 발언했다. 최근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끝으로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를 추모한 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인은 새벽 1시, 새벽 3시 30분마다 나오는 물건을 배송지를 오가며 배송해야 했고, 특히 마지막 3차 물건을 싣고는 아침 7시까지 배송을 끝내기 위해 쉽없이 달려야만 했다"고 했다.

강 준비위원장은 "쿠팡 CLS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면하고 싶고 비용도 절감하고 싶어 택배노동자들을 하청과 특수고용형태로 만들었다. 동시에 로켓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로 고용 불안을 일으켰다. 이번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돌아가신 대다수의 노동자들도 하청 노동자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였다"며 "가장 취약한 노동현장, 그 약한 고리에서 노동자가 죽는다.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 기업의 탐욕만이 있는 곳에서 노동자들의 참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머지않은 과거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메탄올 실명'사고를 당한 점을 언급하면서 "사고 후 몇 년이 흘렀나. 공단의 사람장사는 더 왕성하게 퍼졌다. 공단마다 승합차에 사람이 실려 날라지고 인력업체들은 사무실도 없어도 주소지를 공장에 심어놓고 노동력을 댄다"며 슬퍼했다. 이어 "정부는 알고 있다. 이주민들, 취약한 이들,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이 점점 더 승합차로 실어 날라질 것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점점 나쁘게 만들고,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산재 대책을 내놓으면서 세상이 조용해지길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산재 대책을 내놓아도 불법파견은 이를 피해갈 것"이라고 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는 화성시청에서 유족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을 우선 전했다. 김 대표는 "아리셀 참사가 일어나고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그런데도 화성시는 유족협의회와 대책위를 갈라놓거나 추모제조차도 못하도록 방해에 왔단다. 거기다 현재 유족들을 직계가족만 지원해주고 연관된 가족들의 지원을 당장 끊겠다고 한다"며 "유족들은 지금 분향소 앞에 권리 침해에 대한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화성시는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화성시로부터 받는 2차 가해로 더 이상의 아픔을 주지 않도록 차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요구하며, 함께하는 시민들 모두 힘 보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다영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이주인권 활동가는 "참사 이틀 뒤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아직 현장에서는 탄내가 강했다. 무너져 앉은 아리셀 건물과 참사 현장의 탄내는 이번 참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고 회고하면서 "아리셀 사업주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인건비를 줄이고 안전대책비용도 줄이고 고용에 따른 책임도 회피했다. 사업주의 이기심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미 네 차례의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도 안전교육도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범죄다. 아리셀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위험의 이주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진 문화일꾼이 추모공연 무대에 올랐다. 구슬픈 노래에 참가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촛불을 더 세게 쥐었다. 화성시청에서도 매일 열리는 '시민추모제'가 어김없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추모제 장소를 본관 앞이 아닌 정명근 화성시장실 앞으로 옮겨 유족들과 함께 항의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9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추모행동을 진행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9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추모행동을 진행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9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추모행동을 진행했다. 사진=송승현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